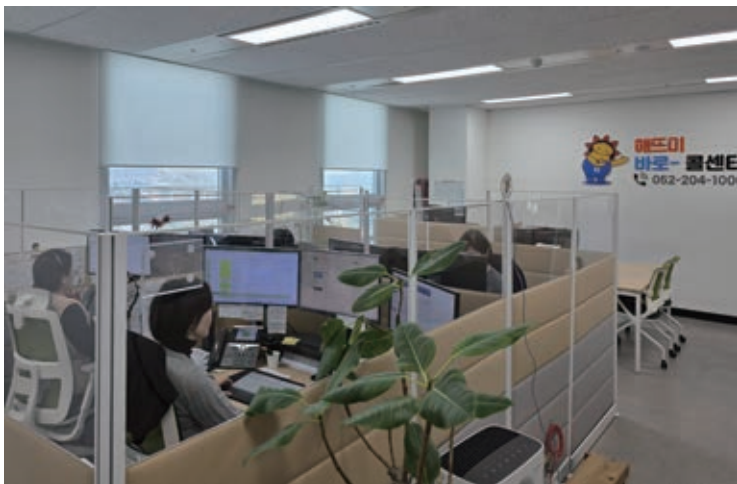


## 해뜨미 바로-콜센터 상담 20만건 돌파

울주군, 하루 평균 민원 332건 이상 처리, 전화 응대율 91.6% 달해



울산 울주군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해뜨미 바로-콜센터’가 개소 이후 상담 건수 총 2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개소한 해뜨미 바로-콜센터는 민원 연결 도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업무 담당자 안내를 위한 불필요한 전화 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에는 상담건수 5만5천 867건을 달성했으며, 2024년 7만5천531건, 지난해 7만4천363

건 등 지난달 말 기준 총 20만5천761건의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콜센터는 총 4명의 상담원이 하루 평균 332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 응대율은 91.6%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간제 상담원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새롭게 채용했다.

이에 따라 모든 상담원이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민원 응대로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시스템 접근 권한을 활용해 업무 담당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해뜨미 바로-콜센터를 통해 민원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민원인의 4대 불만사항(△반복 설명 △전화 돌림 △무응답 △불친절)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6세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호근 기자

## 경남 국가철도망 놓고 ‘한 팀’ 전면 대응

제5차 국가철도망 대응 실무회의… 도·시군·연구원 공동 전략 점검



경상남도는 29일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응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경남 핵심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도와 시군·연구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공무원, 12개 시군 철도 담당 공무원과 경남연구원 연구진들이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동향을 공유하고, 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11개 철도사업의 추진전략을 점검했다.

실무회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정책 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시군별 건의 노선과 주요 쟁점 공유, 노선별 추진계획 점검, 추가 대응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한정된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남 철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논리 보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는 시·군·연구원과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사

업별 요구사항을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의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으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공유하고,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알림으로써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국가계획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철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말 예정인 ‘철도의 날’ 철도유공자 포상 시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진경 도 물류공항공철도과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도와 시군, 연구기관이 끝까지 협력해 경남의 주요 철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룡 기자

## 교통약자 이용권 택시 이동지원 확대해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들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또는 문자·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임산부·영아 등 교통약자들도 많이 이용해 교통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와 이용권(바우처) 택시 증차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부심 생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 사업 대상을 기존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인 1월 26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0세~74세 울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발급 중에 있어 있다. 울산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매월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호근 기자

## 경북, 경북형 임신·출산 공공 인프라 확대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박차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를 가까이에서 살피기 위해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29일 임신·출산 분야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김천과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두루 돌아보며 의료인 등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중점을 뒀다.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김천의료원 옆 연면적 1,432㎡(433평)에 모자동실 12실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설치됐다.

일반적인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대체로 약 280만~350만 원 수준인 데 비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크게 낮은 비용에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산모들의 수요가 높아 경상북

도와 김천시는 모자동실 14실을 추가로 증축해 2027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어서 방문한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도와 구미시가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 개소한 시설로서, 경북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응급 분만과 신생아 집중 치료 가능한 시설

이다. 그간 도내에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없어 수많은 고위험 신생아가 대구·대전 등 인근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야만 했으나 센터 개소 이후 총 412명의 신생아가 집중 치료를 받았고, 182건의 응급분만을 포함해 총 821건의 분만이 시행됐다.

한윤석 기자

##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자금 1분기 2,400억 원 펀대!

AI·신성장·수출기업 등 11개 분야 대상…3월 10일~12일 신청 접수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1.0%~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금의 신청 접수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자금은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며, 주요 지원 분야는

△스마트 AI 혁신·AX 전환(100억 원)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100억 원)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업종 지원(200억 원) △수출기업 지원(400억 원) △조선·방위·원자력·항공우주 등 주력산업 육성 자금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단순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자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

다. 아울러 기존에 적용되던 ‘최근 4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기업 신청 제한’ 규정을 폐지해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대신 평가 항목에 중복 수혜 여부를 반영하고, 신규 신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30점)를 부여해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을 강화했다.

우명희 과장은 “이번 특별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제 도입을

통해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또는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도민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 복지분야 실행계획’으로 6개 복지분야별 34개의 제도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최성룡 기자

## 부산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강서점 개소

폐원한 낙동재가노인요양센터 새 단장, 환경 실천·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부산시는 29일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강서점 개소를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형찬 강서구청장,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김영번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부산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소하는 6호점(강서)은 폐원

한 낙동재가노인요양센터를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로 새출발한다. 시는 유휴시설을 탈바꿈해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거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센터는 명지지구, 예코델타시티와 인접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환경 실천과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사회가치경영(ESG)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강서점에서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자원순환활동과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교육 ▲자원순환 및 친환경 생활 실천 체험 ▲주민 참여형 사회가치경영(ESG) 활동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사회가치경영(ESG)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실천 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공)기업과 협업을 통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를 올해 안에 16호점까지 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교육과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구·군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가치경영(ESG)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 산불예방 위해 ‘탄력적 입산통제’…시민 불편 최소화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구시는 산불 발생 가능성은 낮추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통제가 아닌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중점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탄력적 입산통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 취약도가 높은 셋길 41개 구간을 우선 통제한다.

주 등산로는 개방되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으로 구성된 ‘입산통제 대응단’을 집중 배치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산불위험경보가 ‘심각’ 단

계로 격상될 경우, 셋길 대부분을 통제하고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주요 등산로 위험구간 123곳에 대해서는 부분 통제를 실시해 산불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시민 이용 불편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등산로 통제 구간에는 출입구별 출입금지 피와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블랙스형 CCTV를 설치해 통제구간 관리와 산불 예방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입

산통제에 따른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구·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산통제 사항을 사전 고지했다.

산불위험경보 발령 시 단계별 통제 내용을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시민들이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산불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